

# 전남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

### 민 시장, 현장찾아...한전과 전력공급방안 논의 AI·반도체 산업 뒷받침할 에너지 기반 구축 모색 "6개월 안에 삼 떠야...사전절차 없는 부지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취임 직후 반도체 벨트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 점검에 나선 등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2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찾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점검했다.

민 시장은 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재국 전력계통부사장 등 한전 관계자들과 업무공유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과 송·변전 설비 확충 계획,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선제적인 전력망 확충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통합특별시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전력공급 역량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에너지 기반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은 반도체 생산 일정에 맞춰 전력공급 계획과 송·변전 설비 확충 방안, 전력인프라 구축 현황을 공유했다.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와 폭염에 대비한 전력수급 관

리대책, 송·변전 설비 안전점검, 비상 대응체계 운영 현황도 설명했다.

민 시장은 "삼성과 SK가 호남에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조성할 계획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속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전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첫 번째 과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한전과 실무 핫라인을 구축하고 굳건한 원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이제 명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또 수자원공사를 찾아 대규모 첨단산업 지원 용수 등 수자원 기반시설도 점검했다.

현장 점검 결과 가뭄에 대비한 댐 저수량 확보와 용수 대비 주요 시설 점검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패키징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용수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는 과거 산업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지중송전용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활용되지 않은 풍부한 용수 역량을 보충하게 됐다"며 "이것이 대규모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남권 반도체 패키징프로젝트의 핵심 경쟁력이다"고 말했다.

현장점검에 앞서 민 시장은 이날 아침 광주의 한 라디오방송에서 반도체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팹 조기 착공과 관련해 "(정은승 전남광주반도체전략위원장)

최대한 (착공을) 단축해 보자는 의미로 그런 말씀(올가을이 가기 전에 착공)을 하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6개월 이내에 삼을 떠야 한다"고 말했다.

민 시장은 반도체 팹 입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이제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을이라도, 연말이나 연초라도 뭔가 시작하려면 사전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우선 될 것 같다"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입지가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실행을 도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전략위원회'도 전날 공식 출범했다.

반도체전략위는 민 시장과 삼성전자 사장 출신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한기회위원장 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 고문, 지역 경제계 리더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기업 밀착 지원 및 유치, 소부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등 통합특별시의 AI 미래 반도체밸리 완성을 위한 핵심 지원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이 대통령 "전 국토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박정희·DJ 정부 이어 초격차 산업강국 세 번째 디딤돌"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2일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영향을 총결집해서 새로운 산업 전장에 임하고 있다"며 "반 박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 또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이 대통령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지역 투자에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에는 안되느냐'는 지적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며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특정 지역 중심의 성장전략을 구사해 불균형이 심했고 수도권 집중이 폐해도 컸다. 기업 활동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고 국가 생존도 위협받았다"고 짚었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지방중심 성장이다.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주에 반도체 단지를 만든다기 저기에도 (다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기업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라며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안해주나'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화를 내면 (안된다)"고 말했다.

## 김대중 특별시교육감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 등 인재 양성 총력"

### '삼전닉스' 투자 대응...부교육감 1명 지방정부무직 필요 광주 교육지원청 3곳 추가...초·중 서술형 평가 도입도

김대중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사진)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발맞춰 반도체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직 부교육감 2명 가운데 1명을 지방정부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

해 "반도체 특성화고를 설립하거나 기존 특성화고 학과를 개편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부교육감 3명을 요구했으나 서울 1명, 경기 2명의 형평성을 고려해 2명을 배정했다"며 "2명 가운데 1명은 전남·광주의 교육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특별시교육감

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전남은 22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는

2곳뿐"이라며 "교육청 본청을 슬림화해 광주에 교육지원청 3곳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총 지원청 개수가 정해져 있어 광주지역을 늘리면 그만큼 전남에서 줄여야 하는 지역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평가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초·중·고 평가 방식을 100% 서술·논술형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과정 개발위원을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 전남광주통합선관위 출범...선거관리 일원화

### 장용기 위원장 선출...후속 선거업무·조직 안정화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통합 특별시 시대에 맞는 선거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1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조직 운영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 광주지방법원 장인 장용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에는 위원 관리관(1급), 사무처장(다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기업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라며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왜 우리는 안해주나'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화를 내면 (안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통합 초기 조직 안정화와 행정 연속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장용기 위원장, 위한, 강덕원

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점검해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선거비용 보전·반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실시될 각종 공직선거와 위탁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정시는 기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98)를 주청사로 사용한다. 기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지도2과 근무지로 활용되며, 오는 9월까지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입주해 공동 사용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통역 지원 확대

### 전남광주특별시, 대불산단 등 150여명 대상 10회 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교육 통역 지원에 나섰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상반기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모두 10차례 산업안전교육 통역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언어장벽으로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행동요령 전달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산업현장 3대 안전수칙과 추락·협착 사고 예방법을 비롯해 그라인더, 가스호스 니플, 호스 공중화, 수직롤러 등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비와

설비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안전 관리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비교하며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사업장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역 지원으로 교육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교육 과정에서 현장 애로사항도 즉시 듣고 답변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진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언어장벽 없이 안전교육을 전달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통역 지원을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교육 통역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이나 통합지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